

정권과 재벌로부터 데이콤 지키기 투쟁

정춘홍

데이콤노동조합 정책위원장

글을 정리하며

여기에서 소개하는 데이콤노조의 재벌 반대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언제 마무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행중인 투쟁을 중간에 정리하여 발표하는게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노동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서 재벌개혁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한 시금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 투쟁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중간 중간에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쉽게도 진행중인 투쟁이라 아직 지면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음을 널리 이해해 주기 바란다.

예정된 싸움이 시작되다.

지난 1월11일 수백여명의 조합원들은 한겨울의 매서운 한강바람을 무릅쓰고, 데

이콤 본사 앞에서 투쟁의 출발을 알리는 중식 집회를 갖고 재벌반대 원칙을 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노조 집행부는 정보통신부장관 항의방문을 하였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반도체 빅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데이콤을 LG에 넘겨줄 것이라는 신문보도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정부는 '보상 빅딜'은 없다고 천명하였지만, 정부와 재벌은 비공식으로 교감을 나누는 상태였고,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플레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험난하고도 지루한 데이콤노조의 LG반대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훨씬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즉, 1996년 LG에 대한 PCS 사업권 허가시 정보통신부가 부여했던 데이콤지분 5%미만 보유조건과 LG 구본무 회장이 제출한 데이콤 지분 5%미만 보유 및 경영권 확보시도 금지각서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아쉽지만 소중한 경험, 주주투쟁의 허와 실

데이콤노조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견제하고 바람직한 경영시스템을 만들고 LG의 경영권 장악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이름으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구성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경영참여에서 모법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 데이콤노조였지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험은 전혀 없었기에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소액주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오던 참여연대의 자문을 받으면서 간부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의견권 위임을 요청하는 우편보를 발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3월15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결전의 날이 밝았다. 20여명의 간부들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새벽같이 주주총회장에 집결하여 자리를 잡았다. 회사측도 관리자와 총회꾼뿐만 아니라 사설경호원까지 대거 동원하여 긴장감 속에서 주총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안전벨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여서 겨우 발언권을 얻고 의견을 주장하였지만 단순한 의견 주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조 간부들은 거의 몸싸움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대단한 인내심으로 버티면서 주주총회는 막을 내렸고, 허탈감 속에서 총회장을 빠져 나왔다.

주주총회 참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전치인 주주총회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었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노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주총에 참여할 것임을 알렸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회사 경영에 책임감을 더욱 많이 느낄 것이라는 자위성 의견도 나왔다. 사실 노조가 주총에 참여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른다. 노조는 노조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LG측이 사외이사를 교체하려던 계획을 중단한 것을 보면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있어 보였다. 어찌보면, 노조가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그 자체부터 노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현실을 보면 데이콤노조의 주총 참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사주제도도 종업원지주제의 허구성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콤노조의 주총 참여는 단순히 경영참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로부터 데이콤을 지켜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음을 고려할 때, 평가는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다.

데이콤, 반도체 빅딜의 유탄에 맞다.

정부는 정권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으로 대규모 사업교환, 즉 빅딜

LG는 빅딜 과정에서 그동안 데이콤 지분 확보에 쏟아 부었던 본전(1조원이상)을 뽑아내기 위하여 반도체를 포기하여 정권의 환심을 사면서 보상책으로 데이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음모를 꾸몄다. 정권도 이 음모에 쉽게 동조하였다.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재벌간 이해득실이 극명한 상황에서 빅딜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조치를 주겠다고 협박하면서 밀어부쳤다. 마침내, 반도체 빅딜에서 LG가 카드를 던졌다. 당초 합작형태의 빅딜이 아니라 완전 양도로 급선회하였고, 가격협상에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최종 마무리되었다. LG는 빅딜 과정에서 그동안 데이콤 지분 확보에 쏟아 부었던 본전(1조원이상)을 뽑아내기 위하여 반도체를 포기하여 정권의 환심을 사면서 보상책으로 데이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음모를 꾸몄다. 정권도 이 음모에 쉽게 동조하였다. 왜냐하면, 정부도 특별히 내세울만한 빅딜 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그룹과 삼성그룹은 연초부터 데이콤지분 확대 경쟁에 들어갔다. 모두 속으로는 데이콤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투자차원에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결국 그들의 지분경쟁은 LG에 대해서만 지분을 5%로 묶어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의 빌미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

는 것인가. 불과 3년 전에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LG에게는 데이콤을 포기하도록 하면서 PCS사업권을 허가한 뒤, 이제 와서 LG에게 데이콤을 불하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조치다. 정권이 자신의 존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LG에게 보답을 한 것이다. 정말 "의리있는" 정권이다.

10월15일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금감위는 지난해 재벌들의 데이콤주식 편법 취득, 관리 혐의를 조사하였으나, 빅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중단함)에서도 정권과 자본의 야합은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있다.

4월 총회투쟁과 5월 파업투쟁, 그리고 정치투쟁의 시작

한편 공공연맹은 서울지하철노조를 중심으로 공기업구조조정 중단을 핵심요구 사항으로 하는 파업투쟁, 집회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다. 데이콤노조는 4월 7일 재벌반대 투쟁의 수단으로 파업을 할 것인지를 투표에 붙였고, 85.7%의 투표에 72.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4월19일은 사실상 파업이었지만 총회라는 투쟁방식을 통하여 공공연맹의 투쟁에 동참하였

으나, 실제로는 당면 과제인 LG저지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8개 지역본부를 포함하여 7백여 조합원들이 여의도 LG본사 앞 규탄집회, 전경연/금감위 앞 집회를 갖고 공공연맹의 서울역 집회에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교묘한 방해전략이 끈질기게 이루어졌으나, 자랑스런 조합원들은 이를 막아냈다.

집행부는 제벌반대 투쟁이 회사측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리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였지만,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이 데이콤을 지키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관리자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 대해 강경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데이콤 노조가 내부적인 노사문제로 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쟁은 매우 가치있다고 본다.

마침내 정부는 모든 검토를 끝낸 뒤 LG 측에 지분제한 해제요청을 하도록 하였고, LG는 5월 3일 공식적으로 지분제한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노조는 이미 확정 발표한 투쟁방침대로 5월 4일 오후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5월 6일 정보통신부는 전격적으로 지분제한 해제를 발표하였고, 노조는 예정대로 무기한 전면파업을 강행하였으나, 투쟁의 수위 조절을 위하여 5월 13일 중단하였다. 여기에서 노조 집행부는 통신사업의 성격상 교환기 운용을 중단할 수 없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는 한때 YS정권이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얘기하던 한국통신노조도 경험한 것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결성된 노조가 생산적 노조를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모든 통신시스템의 전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ديل이라는 명분으로 제벌과 아합한 내정부 투쟁의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정치적인 이슈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소속을 불문하고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여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여론은 씨알이 먹히지 않았으며, 유일 야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은 겨우 설득할 수 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등 정치적인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LG 문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밀려나 버렸다.

조직정비와 수요투쟁

대규모 투쟁이후에는 조직이 상당히 와해되거나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데이콤노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10일간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참여조합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조합원과 관리자간의 갈등 등 조직 문제가 발생하고 집행부 안에서도 상황인식에 대한 차이 때문인지 불협화음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빅딜이라는 명분으로 재벌과 아합한 대정부 투쟁의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정치적인 이주화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결국, 노조는 투쟁 경과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논란을 거듭했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투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즉석 발언이 난무하는데 대해 많은 비난이 있었고, 지역과 수도권 조합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커다란 후유증이었다. 더 이상 현 집행부로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없다는 비판세력이 힘을 얻어갔고, 마침내 5월 21일 간부워크숍에서 임원진 사퇴를 요구했다. 5월 24일 중집위 회의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투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임원진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고, 5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 속에서 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투쟁의 밑그림도 더욱 분명해졌다.

6월에는 조기선거가 치뤄지고, 7월 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 집행부는 점점 분명해지고 대세로 굳어지고 있던 재벌개혁 정책을 투쟁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투쟁 구호를 단순한 '재벌반대'에서 '재벌개혁' (해체)으로 확대시켰으며, 중앙집행위원 선임, 대의원 선거 등을 통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더욱 강한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조기선거와는 별도로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LG를 압박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 수요집회는 5월말부터 집행부가 바뀐 뒤인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나라당, 국민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등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19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9월 말부터는 목요일로 조정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적 투쟁 :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6월 초 노조는 법적 투쟁의 일환으로 LG가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데이콤 주식을 은닉·관리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혀서 처벌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이 제소는 노조보다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통해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이후 노조는 공정위 앞 조사촉구 집회를 수 차례 가지고, 독점국장 면담을 통하여 투명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무렵 (가칭)민주노동당에서도 재벌개혁 차원에서 데이콤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선근 위원장은 이때부터 10월 현재까지 각종 집회

에서 연대투쟁사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재벌해체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공정위는 3개월의 조사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뒤, 9월초 드디어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삼척동자라도 LG가 데이콤 주식을 은닉·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즉 위장계열사의 데이콤 주식의 취득시기·매입금액과 LG종금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기·금액, 데이콤주식 매도시기·매도금액과 차입금상환시기·금액을 비교하거나, 위장계열사의 매출액·채무구조와 데이콤주식 취득기액을 비교해 볼 때, LG측의 교묘한 관리 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전말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맞지도 않는 규정과 논리를 동원하여 LG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던 것이다.

이사회 봉쇄투쟁의 승리와 대화의 물꼬뜨기

LG는 9월 13일 이문호 데이콤 사외이사(LG회계부회장) 명의로 데이콤에 9월 20일 개최예정인 100회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안)을 안전으로 추가 상정할 것을 공식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곧바로 대규모 증식집회를 열어 LG의 음모를 규탄하고, 이사회 총력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데이콤 정관상 이사회 안전은 개최 1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가 모자란다는 노조와 일부 사외이사의 문제제기로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9일

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약간의 시간을 벌어 봉쇄작전을 보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다.

9월 28일 저녁, 간부들은 노조 회의실에 집결하여 최종 점검을 완료한 뒤 조별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목표로 선정된 이사들의 자택 주변에서 밤을 새고, 출발하는 이사들을 붙잡고 읍소반 협박반으로 실량을 벌였으나, 대표이사 사장은 노조의 원천봉쇄에 대비하여 자택주변에 사설경호원을 상당수 배치하여 노조의 1차 저지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상황 변화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사장(이사회 의장)을 봉쇄하기로 하였던 위원장은 이사회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이에 다른 간부들은 이사회장에 집결하여 호텔 입구에서부터 도착하는 이사를 경호하고 이사회장 앞에도 저지선을 치고 있던 회사측의 사설경호원과 일촉즉발의 대치상태를 연출하였다.

노조 간부들은 이사장이 도착하자 곧바로 스크림을 짜고 이사회장 입장을 봉쇄하면서 LG그룹의 부도덕성과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사장은 노조의 항의 및 불리직 충돌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였는지 이사회 불참을 선언하고 돌아갔다. 이사장을 제외한 12명의 참석 이사들은 논의를 거쳐 이사회를 '개회후 정회' 처리하고 10월 4일 16시에 속개하기로 정리한 다음 대표이사 사장은 위원장에게 결정 내용을 알렸다.

노조는 9월 30일 대규모 LG규탄집회를

아직 데이콤노조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
노조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자본의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벌반대 투쟁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LG 앞에서 개최하여 LG상징물을 때려부수고, 불태우는 의식을 가졌는데, 이날 집회에는 (가칭)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투쟁의지를 달구어 주었다. 이날 집회는 지금까지 우회적으로 LG에게 압박을 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의 투쟁이 LG와의 직접 투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집회 종료 후 2박 3일간의 간부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투쟁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10월 4일 9시 중집위원·지역본부장 연석회의를 통하여 이사회 봉쇄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 후 사장실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사장은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는지 상임이사 5명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LG측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임을 밝혔다. 노조는 곧바로 연석회의를 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봉쇄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사 대표간에 3:3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원천봉쇄 투쟁에 추가로 가세하기로 하였던 대의원들은 오후 1시에 본사 1층 로비(다른 장소에서 속개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용계획 때문에 변경)에 집결하여 회사 대표와 면담 예정

인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과 함께 이사회장으로 이동하여 봉쇄작전에 들어갔으며, 상임이사들의 불참 등으로 이사회가 자동폐회(유회) 되었음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 이로써 이사회 봉쇄작전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 노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렇지만, 이사회 원천봉쇄 투쟁과정에서 데이콤 경영진이 제안했던 LG측과의 대화 방안은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조는 중집위 회의의를 통하여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노조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영진을 통하여 LG측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요구사항은 그동안의 투쟁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의 유지 발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의 존속과, 이사회 구성은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사장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사외이사로서)하여야 하며, 데이콤과 LG계열사간에 인력 교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

국정감사 및 공정위 재조사 촉구

국회 정부위원회는 10월 8일 LG의 데이콤주식 은닉·관리에 대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 국정감사는 노조가 그 동안 정치권을 상대로 수개월간 추진하였던 작업이 나름대로 일궈낸 결실이었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9월 초 공정위 발표 내용이 사실과 정반대였음이 드러났다. 즉, LG는 99년 3월 데이콤 정기주총에서 위장계열사의 데이콤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위임받아서 행사하였다. 이는 LG가 위장계열사를 관리해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 6월과 7월에는 위장계열사가 보유하고 데이콤 주식 상당수를 LG전자로 장내 거래를 통하여 넘긴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도 LG와 위장계열사가 사전에 공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데이콤노조는 10월 14일 공정위 앞 집회를 통하여 국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10월 15일 독점국장 면담을 통하여 노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LG의 언론 김들이기

노조 간부들은 LG반대투쟁을 해오면서 정치권과 보수언론에 대한 환멸감을 절실히 느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변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LG의 약속파기 및 사기행위를 직접 비판하지는 못할 망정 LG가 대세라는 말을 하더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존재임을 새삼스럽게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벌들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래도 덜 미워진다. 광고몰량이 주요 재벌에게 편중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입김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는 변명이 이해가 된다는 의미이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었는데, LG가 노조의 성명서 광고 추진 시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의사를 언론사에 보였다고 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재벌의 엄청난 위력은 새삼스레 우리를 분노케 한다.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데이콤노조의 투쟁이 단지 고용 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면 외부 연대세력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칭)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그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LG그룹의 부도덕성, 정권의 잘못된 재벌 정책 비판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았다면 어느 단체가 단위노조의 투쟁에 동참할 수 있던 말인가. 정권과 총자본을 상대로 하는 단위노조의 투쟁이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연대세력과의 전방위투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콤노조의 저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데이콤 종사원뿐만 아니라 데이콤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와 데이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위해서도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LG가 허황된 야욕을 버리고 데이콤의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를 보장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말해, 눈 앞에 예상되는 고용불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재벌그룹 편입에 따른 기업문화의 왜해에 따른 문제점 방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데이콤노조의 보이지 않는 저력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수 고참급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관리자들은 LG가 들어오는 것은 대세이기 때문에, 노조는 이를 인정하고 고용보장이나 임단협 승계(보장)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금만 깊게 생각한다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데이콤은 창사이래 대주주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자율적인 경영을 해왔으며, 이러한 것은 데이콤의 기업문화와 종사원들의 사고방식에 뿌리깊이 박혀있는데, 총수의 지배체제로 180도 전환되는 경우 어떻게 그 문화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설령 고용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떠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데이콤노조 투쟁의 핵심은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의 유지와 그의 발전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아직 데이콤노조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 노조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자본의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벌반대 투쟁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데이콤노조가 경영참여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살려, LG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감시 활동으로 확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데이콤 종사원뿐만 아니라 데이콤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와 데이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위해서도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LG가 허황된 야욕을 버리고 데이콤의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를 보장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